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의안 번호	200
----------	-----

제출년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개정 「전자정부법」(‘07. 7. 4일 시행)에서 그간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기존의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03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법 제50조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함.
-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거 조합구성원인 시·도 의회의 해산동의가 필요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및 164조제1항

#### 나. 개발원의 설립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음(전자정부법 제50조)
-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전자정부법 부칙 제3조)
-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전자정부법 부칙 제4조)
- 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봄(전자정부법 부칙 제5조)

#### 다. 첨부

-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기본계획

[별첨]

---

#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기본계획

---

2007. 8

# 목 차

<b>I . 설립배경 및 경과 .....</b>	<b>1</b>
1. 개발원 설립배경 .....	1
2. 그간의 경과 .....	2
<b>II . 조합의 해산 .....</b>	<b>3</b>
1. 기본방향 .....	3
2. 해산절차 .....	3
3. 조치사항 .....	5
<b>III . 개발원 설립계획 .....</b>	<b>6</b>
1. 개발원의 주요기능 .....	6
2. 설립 기본방향 .....	6
3. 개발원의 기관구조 .....	7
4. 개발원 운영방안 .....	8
5. 설립절차 및 일정 .....	10
6. 조치사항 .....	12

#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기본계획

-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설립·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 I 설립배경 및 경과

### 1. 개발원 설립배경

#### 1. 기관의 성격을 전자정부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일원화

- 자치정보화조합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립·운영되어 왔으나 자치단체 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이한구의원, '05.11월)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어 기관의 지위와 안정성이 강화되는 반면,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급변하는 정보화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일원화

#### 2.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기반 확보

-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중앙부처 정보화사업 위탁근거 등이 마련되어 기관의 위상과 안정성이 강화
- ➡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사업에 개발원이 전문 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보화 지원사업이 확대

### 3.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기능의 강화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 자원연계 및 공동이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지원과 위·수탁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

### 4.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조합이 보유·운영중인 정보자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기관의 역할 확대
- ➡ 중앙과 지방의 연계체계 운영상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보안 및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진단분석, 컨설팅, 복구지원 등 체계적으로 대응

## 2] 그간의 경과

-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안 : '04. 11. 20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04. 11 ~ '06. 4  
※ 개발원 전환 관련 전자정부법 개정안 시도 의견조회('06. 1. 26)
- 조합회의 보고(출연기관으로 법인전환 관련) : '06. 4. 5
- 국무회의 의결 : '06. 6. 13
- 국회 본회의 의결 : '06. 12. 8
- 법 개정안 공포(법률제8171호) : '07. 1. 3
- 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07. 1. 30
- 개발원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행자부차관 주제) : '07. 4. 16
- 개발원 설립계획 보고(행자부장관) : '07. 4. 23

## Ⅱ 조합의 해산

### ① 기본방향

- 시·도의회 조합 해산동의 및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등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조합의 해산절차 이행
- 개발원으로 전환·설립을 위해 조합을 해산함으로 조합 해산은 개발원 설립과 병행하여 추진
- 조합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 파견공무원 등은 개발원으로 포괄승계

### ② 해산절차

※ 조합 해산일정은 시·도 의회의 「조합 해산 동의절차 완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후 재조정 예정

#### (1) 조합회의('07. 6월)

##### ○ 조합 해산결의

- 해 산 일 : 개발원 설립일('07. 10월 예정)
- 결의내용
  - 시·도 의회 조합 해산동의(안) 상정 및 행자부장관 승인절차 이행
  - 개발원으로 승계될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의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산절차 이행
  - 조합 해산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

##### ○ 청산인 선임

- 선임기간 : 조합회의 선임일 ~ 조합 해산 등기일까지
- 청산인의 임무
  - 조합의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의무의 실사결과 확인
  - 조합과 체결한 협약, 계약, 기타 권리의 이해관계자 통보 등
  - 승계대상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의무 등의 조합회의 보고

## (2) 해산동의 및 승인절차 이행

### ○ 시·도의회 조합 해산 동의(안) 상정

- 시 기 : '07. 7 ~ 9월
- 안건내용 :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원으로 전환·설립을 위해 조합을 해산

### ○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요청

- 시 기 : '07. 10월(시·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후)
- 신청서류 : 시·도의회 동의(안) 의결결과를 첨부(공문으로 신청)

## (3) 청산 및 권리·의무의 이관

### ○ 재산 및 채권·채무 실사

- 시 기 : '07. 9월(청산기준일 설정 후 1개월 이내)
- 주요내용
  - 조합이 취득한 유·무형 재산 및 채권·채무 조사
  - 재산 및 채권·채무 등에 대한 이관조서 작성 후 청산인에게 제출

※ 개정 전자정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는 개발원이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하므로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해산 등기를 할 수 있음(대법원 회신)  
다만, 실사 결과의 대사확인을 통한 승계대상 자산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작업 이행

### ○ 조합회의(최종회의) : '07. 10월

- 조합의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대한 권리·의무의 개발원 이관범위 확정

## (4) 조합 해산등기

### ○ 시 기 : '07. 10월(개발원 설립이후)

### ○ 구비서류 : 조합 해산 관련 시도의회 동의 및 행자부장관 승인서



### ③ 조치사항

#### (1) 해산·청산절차 법률자문

- 자문대상 : 대법원 및 고문변호사
- 자문내용
  -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사항
  -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등기에 관한사항

#### (2) 조합 해산결의(안) 및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안) 등 조합회의상정

- 시 기 : '07. 6월(서면결의)
- 주요내용
  -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절차, 개발원 운영방안 등
  - 조합 해산 동의(안) 시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협조

#### (3) 시·도의원 및 정보화책임관 워크숍 개최(잠정)

※ 시·도의 의회일정 등을 감안하고 행자부 및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

- 개최시기 : '07. 7 ~ 8월
- 주 관 : 행정자치부와 조합 공동주관
- 주요내용
  - 개발원 전환설립의 필요성 및 현안사항 보고
  - 지역정보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개발원의 발전방안 토론 등

### Ⅲ 개발원 설립계획

#### 1 개발원의 주요기능

- 전자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지원
- 지역정보화를 위한 행정기관 위탁사무 수행
-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 공동활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및 유지관리
- 자치단체의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등의 표준화 지원
- 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 2 설립 기본방향

##### □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지원기관의 역할강화

- 지역정보화를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 관련업무 위·수탁을 위한 대외 경쟁력 강화
- 지역정보화관련 조사·연구 및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

##### □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및 기관의 안정성 도모

- 위·수탁 사업비 운영방식 개선 및 사업별 독립채산제 도입
-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 및 사이버교육 확대 등을 통한 자체수입원 개발
- 기초자치단체의 개발원 참여 및 지원을 위한 특별회원제 도입

##### □ 기관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시스템 구축

- 직렬 통합, 경쟁체제 도입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우수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제 도입
- 성과중심의 기관경영방식 도입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

### ③ 개발원의 기관구조

- 유사기관 정관의 비교·검토 및 준비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개발원 정관(안)에 반영
- 시·도 의견조회와 행자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안 확정

#### (1) 임원의 구성

- 개발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원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
- 이 사 : 시·도 부단체장(행정),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원장, 상임이사(1인) 및 외부 선임인사(5인)로 구성(임기3년, 연임가능)
  - 이사장은 기관의 위상강화를 위해 외부 선임이사 중 저명인사를 추대
  - 시·도 및 행자부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 감 사 : 임기 2년(연임가능)

#### (2) 임원의 선임절차

구 분	선 임 절 차
이사장	외부 선임이사 중에서 저명인사를 이사회가 선임
원 장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복수) ▶ 이사회 의결 ▶ 행자부장관 임명 ※개발원의 초대원장은 전자정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현 조합장이 승계
이사 및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선임 ▶ 행자부장관 승인
상임이사	행자부장관 추천 ▶ 이사회 선임

## 4 개발원 운영방안

### (1) 지역정보화 지원기능 강화

#### ○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 전자정부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 중앙부처의 정보화업무 중심으로 출연되어온 전자정부지원사업에 개발원이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 정보화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가능

#### ○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회원제 도입

- 폭넓은 자치단체의 참여와 정보화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회원제 도입
- 회비를 납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보화관련 컨설팅 및 감수, 서비스데스크 운영,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지 보급 등을 지원

### (2) 경영수지구조 개선

#### ○ 위·수탁업무 수행방식 개선

- 위·수탁사업은 모든 비용이 당해 사업에서 충당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 정보화업무 위·수탁 협약 시 일정비율(3~5%)을 위탁관리비로 확보
- 위·수탁 업무 발굴대상 확대(행자부, 자치단체 → 모든 행정기관)

####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변화에 따라 전산직 위주의 교육에서 행정직 등도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
- 자치단체의 부족한 교육시설 해소와 개발원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

#### ○ 출연금(분담금) 부담 완화 및 인상률 최소화

- 개발원 설립·운영자금의 일시출연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분담금 제도를 당분간 유지
- 개발원의 업무확대에 따른 운영재원 증가분은 수익구조 개선으로 자체 충당하고 시·도 분담금 인상은 물가상승률 반영수준으로 최소화

### (3) 조직의 경쟁력 강화

#### ○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 조직구조는 원장→상임이사→실·본부장→팀장체제로 설계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발원의 비전에 부응하는 최적의 조직 개편(안) 마련
- ※ 개발원 성장전략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 : '07. 4~6월(한국행정연구원)

#### ○ 인사관리 제도 개선

- 벽 없는 조직구현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직렬 통합
- 개발직, 관리직 → 사업관리직으로 통합(연구직은 현행유지)
-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부직의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 적용대상 : 실·본부장, 단장 또는 센터장
- 팀장급 직위에 대한 내부경쟁체제 도입
- 파견공무원 또는 고유직원 중 능력이 우수한자를 팀장으로 보임
- 팀장의 보직과 해당직급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직위수당 지급)

#### ○ 선제적 행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추진

- 미래 대응 및 창조적 사업발굴을 위한 혁신전략팀 구성·운영
- 사업추진 단계별 위험요소에 대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해 정보화 사업 심사·평가기능 강화

### (4) 능력과 성과중심의 경영관리체계 도입

#### ○ 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 과업목표 설정에 의한 책임경영제 확립
- 업무성과의 인사관리 연계

####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수준 개선

- 기관장 및 직원 보수수준을 유사기관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
- ※ 현재 유사기관 보수평균 단순 비교시 76% 수준
- 기본급 인상보다는 성과급 지급을 확대

## 5] 설립절차 및 일정

※ 개발원 설립 일정은 시·도 의회의 「조합 해산 동의절차 완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후 재조정 예정

###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

- 구성일시 : '07. 1. 30
- 구성인원 : 8명(행자부 2, 시·도 4, 조합 2)

※ 제22회 조합회의(임사회, '07.5.3)에서 시·도 위원 2명 추가할 것을 결의

#### ○ 주요역할

- 조합 해산 및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안) 수립
- 개발원 정관(안) 및 필수 규정(안), 개발원 예산(안) 등 작성
- 개발원 설립에 따른 제반절차 및 주요사안 협의·조정

####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07. 2월 ~ 개발원 개원 시까지
- 주요일정
  - '07. 2월 : 준비위원 위촉동의
  - '07. 6월 : 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안) 등 협의
  - '07. 7~9월 : 개발원 정관(안) 작성 및 설립관련 제반절차 이행
  - '07. 10월 : 설립발기인 창립총회 개최
  - '07. 10월 : 이사회 개최 및 개원식 준비(준비위 해산)

### (2) 설립발기인 구성

#### ○ 시 기 : '07. 9월

#### ○ 구성인원 : 17명(행정자치부장관,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장)

#### ○ 주요역할 : 개발원 정관확정 및 기명날인, 창립총회 개최 등

※ 정관(안)은 개발원 설립준비위에서 작성 후 시·도에 송부예정

### (3) 창립총회 개최

- 시 기 : '07. 10월
- 참석대상 : 개발원 설립발기인 또는 의결권 위임자
- 주요내용
  - 개발원 정관 및 설립취지문 채택
  - 이사장 및 임원(원장, 이사, 감사 등) 선출
  - '0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4) 개발원 설립허가

- 시 기 : '07. 10월(창립총회 개최 후)
- 허가관청 : 행정자치부

※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4조제3항  
13호에 규정된 사항임

- 신청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

### (5) 개발원 설립등기

- 시 기 : '07. 10월(설립허가 일부터 3주 이내)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일, 이사, 자산총액 등
- 구비서류 : 정관 이사 자격증명, 설립허가서, 재산목록, 대표이사 인감 등

### (6) 이사회 개최

- 시 기 : '07. 10월
- 상정안건 : 개발원 운영을 위한 필수규정(안) 등

## 6] 조치사항

### (1) 개발원 필수 규정 제정

- 개발원 설립 및 기관운영의 기본골격이 되는 주요규정을 우선 제정
  - 이사회 운영,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관련규정
- 준비위 검토 및 시·도 의견조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

### (2) '07년도 개발원 예산(안) 수립

- '07년도 조합 예산을 기초로 하되, 조합의 청산결과 재산·부채의 이관 및 개발원 설립 시 출연금 규모 등을 확정하여 개발원 예산(안)을 새로이 편성

### (3) 개발원 CI(Corporate Identity) 설계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개발원의 비전과 도약을 상징할 수 있는 혁신적 CI 설계(개발원 旗 및 관인 등 제작)

### (4) 개발원 조직설계

- 『개발원 성장전략 및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업무별, 기능별 조직진단 실시
  - 기 간 : '07. 4 ~ 6월
  - 주요내용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수립
    - 개발원의 안정적이고 발전적 성장모델 제시
    - 조합 조직진단을 통한 개발원의 혁신적인 조직설계
    - 개발원의 기능별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식 제시
-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내부 토론 및 준비위 검토 등을 거쳐 최적의 조직·정원 개편(안) 마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07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8월 27일
3. 상 정 일 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9. 11)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 1. 제안이유

- 개정 「전자정부법」(2007. 7. 4. 시행)에서 그간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기존의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2003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법」 제50조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함.

-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거 조합 구성원인 시·도 의회의 해산동의가 필요하다.

#### 조합해산 및 개발원 설립절차

##### · 조합 해산절차

조합회의 해산결의	▶	시도의회 해산동의	▶	조합청산 (재산·부채 실사)	▶	조합 해산승인 (행자부장관)
‘07. 6월		‘07. 7~9월		‘07. 9월		‘07. 10월

##### · 개발원 설립절차

개발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설립발기인 구성(시·도 지사)	▶	창립총회 개최	▶	개발원 설립허가 (행자부장관)
‘07. 2월		‘07. 9월		‘07. 10월		‘07. 10월

###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중앙·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12월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설립되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조합인 “자치정보화조합”을, 개정된 「전자정부법」과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의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 파견공무원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포괄 승계하며,

“자치정보화조합”이 수행하던 자치단체 공동사무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려는 것임.

○ 본 동의안 검토결과

기관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이 갖고 있는 자치단체조합의 한계 극복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대전광역시의 분담금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